"감염성의료폐기물 처리 이대로는 안돼"

양영환 전주시의원, "관련 부서 단속 · 수거로 이원화 돼… 단속된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어"

양영환 전주시의원은 감염성 폐기물 처리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양영환 시의원(평화1동, 동서학동, 서서학동)은 26일 제33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전주시 감염성의료폐기물의 부적절한 처리 실태를 지적하고 근본적 대책을 마련을 촉구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감염성의료폐기물은 인구 밀집도가 높은 현대도시환경의 특성을 볼 때 일반폐기물과는 별도로 특별한 경로를 통해 별도 관리가 필요한 위해성이 높은 폐기물로, 전주시 감염성폐기물 처리 절차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양영환 의원

양 의원은 "최근 시험가동 중인 종합리싸이클링타운에 혈액 · 체액 등이 묻은 수액 세트 및 주사기 등이 일반폐기물에 섞여 반입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이에 수시로 종합 리싸이클링타운을 드나들며 유심히 살펴보니 실제로 감염성폐기물이 일반마대 또는 검은색 비닐봉투에 담겨 반입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양영환 시의원은 "관리 감독기관인 전주시의 관련 부서는 단속과 수거로 이원화 돼 감염성폐기물 처리에 대한 책임회피에 급급한 실정"이라며 "단적인 예로 2008년부터 현재까지 감염성폐기물 처리위반 단속 현황을 보면 폐기물처리 부적정으로 단속된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또한 "일반 재활용폐기물 수집 · 운반 업체는 재활용 폐기물 수거 시 구분 수집해야 하는데도 작업 효율성 및 수거직원의 관련 법령 미숙지 등의 사유로 인해 감염성폐기물 여부와 관계없이 재활용폐기물과 비슷해 보이는 모든 것을 수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이어 "현대도시사회는 높은 인구밀집도로 인해 감염성 질환 발병 후 대처 시 천문학적인 예산과 치유할 수 없는 후유증을 겪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역설했다.

양 의원은 "전주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의 우를 범하지 않도록 과거 사례를 되새겨 시민 모두가 건강한 생활과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감염성의료폐기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 강력한 단속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재 기자

이정현 '지도부 퇴진' 사실상 거부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26일 "당 대표인 저는 오늘부터 당사에서 사태가 수습될 때까지 상주하면서 사태 수습을 지휘할 것"이라며 친박계 일색인 현 지도부를 교체하라는 당내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새누리당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늘 최고위원들은 작금의 사태가 국민의 실망과 분노가 크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이번 사태와 관련 조사 받아야 할 사람들은 조사를 받아야 하고, 또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고위원들은 어제 대통령이 지체없이 국민 앞에 깊이 사과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스스로 그만큼 이번 사태가 엄중하다고 하는 것을 인식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며 "사실을 인정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사과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또 "최고위원들은 국민들이 이번 사태를 대통령의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 관련 있는 사람들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수사와 처벌을 해야 한다는 점, 국정 전반에 대한 쇄신을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면서도 "국정 현안과 민생, 예산 국회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데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했다"며 현 지도부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뉴시스

최순실 의혹은 계속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장에 참석한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최순실 의혹과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김관영 '국감 등 안건조정위 제외' 국회법 개정안 발의

국정감사 일반증인 채택과정의 방패막이가 됐던 국회법의 안건조정위원회 관련 조항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의사일정이 한정돼 있고 일반증인을 포함하는 국정감사, 국정조사, 인사청문회 관련 안건을 안건조정위 대상안건에 제외하는 방안이다.

26일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군산)는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회법 제57조2의 제1항에 안건조정위원회 제외 대상 안건에 기존 예산안 등과 법사위 회부 안건 외에도 국정감사 · 국정조사 ·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안건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현행 국회법상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의 요구가 있으면 여야 동수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장 90일간 조정기간을 거쳐 처리된다.

이는 국회선진화법 개정 당시에 도입된 제도로서 원래 목적은 과반의석 이상의 다수당이 특정안건을 의결로 밀어붙이는 것을 방지하고 안건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하자는 취지이다.

김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 증인채택과정에서 새누리당이 당초 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빌미로 의사일정을 미뤘다"면서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이렇게 편법으로 법취지에 어긋나게 안건조정위원회가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건조정제도는 법률안 심사를 전제로 만든 제도인데, 국정조사나 인사청문회 등은 일회성 안건으로 의사일정이 확정된 것"이라며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한다는 것은 이런 중요한 국회일정을 하지 말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군산=문정곤 기자

"박근혜는 하야하라"… 민주노총 전북본부 시국성명

"정권이 불통이었던 이유를 이제서야 알게 됐다. 국정 책임자가 숨은 권력 실세였기 때문"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6일 시국 성명을 통해 "권력 실세는 타국으로 도피했고, 허수아비 정권은 허둥대고 있다. 온 나라가 전 세계의 조롱거리가 돼버렸다"며 "박근혜는 하야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력도 불분명한 최순실이라는 자가 국정 비밀을 보고받고 대통령 연설문을 첨삭해왔다. 심지어 인사, 외교, 대북 정책까지 개입했다. 이것이 나라인가"라며 "그간 대한민국이 숨은 권력 실세들에게 어떻게 농락당해왔는지,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소식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행사하는 모든 권력은 헌법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위임받은 권력을 국민 몰래 다른 사람에게 이양했다. 봉건 시대에도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다. 국가권력이 사유화됐고, 헌정은 파괴됐다"고 비판했다.

전북본부는 "노동개악과 전교조 법외 노조화, 교과서 국정화, 위안부 합의, 사드배치, 이 모든 일들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따라 강행됐다"며 "수많은 국민이 반대했지만 대통령이 나서서 이를 짓밟았고, 정권의 물대포는 백남기 농민의 목숨까지 앗아갔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들은 정권이 불통이었던 이유를 이제서야 알게 됐다. 국정의 책임자가 대통령이 아닌 숨은 권력 실세였기 때문"이라며 "박근혜가 대한민국 대통령을 참칭해 추진했던 모든 정책은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박근혜 정권 퇴출을 위한 행동에 즉각 돌입할 것"이라며 "이 행동은 11월12일 민중총궐기에 최대 집결되고, 박근혜가 대통령직을 내려놓을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제 단체, 정당, 국민에게도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리고 민주주의와 민생을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설 것을 호소한다"며 "우리에게는 4 · 19, 5 · 18, 6 · 10 항쟁으로 이어지는, 불의한 정권을 끌어내렸던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다"고 당부했다.

/고민형 기자

"대통령, 당적버리고 거국중립내각 구성하라"

문재인 "박 대통령이 초래한 위기가 북핵보다 더 무서워"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사과 기자회견에도 불구, '비선 최순실'의 국정농단 전말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대해 "대통령이 초래한 위기가 북핵보다 더 무섭다"고 꼬집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특별성명을 내고 이 같이 말한 뒤, "대통령이 아무 권위 없는 식물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측근 비리는 대통령 자신의 비리였다. 대통령 스스로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렸다"며 "국민들의 분노와 상실감이 하늘을 찌른다"고 개탄했다.

문 전 대표는 "대통령의 사과는 진정성이 없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며 또 다시 국민을 속이려 했다"며 "국민들은 대통령이 정상적 국정수행을 계속할 수 있을지 강한 의문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표는 이어 "남은 임기 동안 국정은 표류할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와 안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큰 걱정"이라며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가 정말 위험하다"고 우려했다.

문 전 대표는 그러면서 "대통령은 다시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용서를 구해야 한다. 진실의 전부를 밝히고, 책임 있는 사람들을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며 "대통령 스스로 관련된 사람들과 함께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등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먼저 자청하시고, 검찰 수사에 협조하시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그와 함께 당적을 버리고 국회와 협의해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해야 한다"며 박 대통령의 새누리당 탈당을 촉구했다.

문 전 대표는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강직한 분을 국무총리로 임명해 국무총리에게 국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고 거국중립내각의 법무부장관이 검찰 수사를 지휘하게 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그 길을 선택하신다면 야당도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총리도… 실장도… 최측근 장관도

"나는 최순실 몰랐다"

26일 국회 예결특위에 출석한 박근혜 정부 핵심 각료 전원은 '비선 최순실'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밝혔다. 국무총리도 청와대 비서실장도 경제부총리도, 최측근 장관까지도 하나같이 자신들은 모르는 일이라고 똑같은 답변을 반복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해 "국민에게 걱정과 염려를 끼친 점에 대단히 송구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사안 자체는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사과했다.

황 총리는 그러면서 '내각 총사퇴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황 총리는 지난 9월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최순실 씨가 청와대 인사에 개입하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브로치, 목걸이 등 액세서리 등을 선물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봉건시대' 발언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은 몸을 바짝 낮췄다. 이 실장은 "최순실이라는 이름은 언론을 통해 알았지만 이렇게 문제가 됐다는 것은 최근에야 알았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최씨에 대해 "그분은 공적으로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제가 그분을 알았던 적도 없고 그렇기에 그분은 평범한 시민, 주부로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최측근 조윤선 문화체육부 장관도 "최순실 씨에 대해서는 언론보도로만 접했고 한 번도 만나거나 아는 분이 아니다"라며 '비선 최순실'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최씨의 국정농단에 대해 "제가 지금까지 일을 하면서 한번도 그럴 가능성에 대해 전혀 의식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역시 "최씨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대통령의 연설문은 물론 외교순방일정, 인사자료까지 훑어본 최순실이었지만 내각의 어떤 인사도 최씨의 존재를 몰랐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비선 실세' 최순실의 존재에 예결위를 지켜보던 여당 의원들도 한숨을 내쉬었다. /뉴시스

최순실 재산은 얼마… 수백억? 수천억?

최순실씨(최서원으로 개명)가 비선으로 활동하며 국정을 농단한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최씨와 딸 정유라씨가 수백억원 가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들의 재산규모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최씨 모녀는 독일에 거주하며 호텔은 물론 다수의 부동산을 구매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최씨의 딸인 정유라 씨가 현금을 이용해 고가의 승마용품을 구매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현재 최씨 모녀는 서울 강남구의 빌딩과 강원도의 땅, 독일의 호텔과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 소유의 서울 강남 미승빌딩은 시세가 약 2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강원 평창군 용평면에 시세 10억원 가량의 7만 평 규모의 땅을 소유하고 있다.

독일에도 최씨 모녀가 소유한 부동산이 상당하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인근 슈미텐 지역에 거주하며 지난해 11월쯤 사들인 '비덱 타우누스 호텔'을 사들였는데 현재 알려진 구입비용은 약 6억 8,000만원이다. 하지만 실제 가치가 20억에 이를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추가로 매입한 주택 3채의 가치가 20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이밖에도 그동안 국내에서 소유한 땅 ▲미사리 카페촌 ▲서울 강남구 역삼동 주택 ▲서울 강남구 신사동 건물 등을 매각해 160억원 가량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종합해보면 300억~400억원 자산가란 결론은 쉽게 할 수 있다. 하지만 독일 등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설치해 자금을 운용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나오면서 실제 재산은 수천억원에 이른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최씨의 재산증식 과정은 알려지지 않았다. 최씨는 1980년대 후반 서울 강남 땅을 잇따라 사들인 바 있다. /뉴시스

윤병세 "최순실 여권 정지? 요청 받은 바 없어"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26일 독일에서 행적이 묘연해진 최순실 씨 모녀에 대한 여권 효력정지 여부와 관련, "이 건에 대해 아직까지 특별히 협조요청 받은 게 전혀 없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권법 19조에 따르면 외교부장관이 여권 반납을 명령할 수 있다. 최씨 모녀의 여권을 정지해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귀국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에 이같이 답했다.

윤 장관은 그러면서 "나중에 당국의 조사 현황과 검토결과가 오거나, 판단이 있으면 말씀드리겠다"고 여권 효력 정지 여부에 대해 즉답을 피했다.

이 의원은 이에 "검찰이 이미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데, 외교부가 검찰과 법무부의 요청을 기다릴 게 아니다"며 "국기문란이라는 심각한 상황에서 여권 정지를 할 수 있지 않느냐"고 윤 장관을 압박했다.

윤 장관은 그러나 "이 문제는 단순하게 말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관련 당국에서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사안"이라고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뉴시스